

“특별법 빨리 처리 안되면 문화전당 9월 개관 차질”

광주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시민단체 한목소리

윤장현 시장도 여야 지도부 만나 처리 요청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 뒤집기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6일자 1면>에 대해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특별법 처리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특별법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시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프로젝트로, 특별법이 지금 처리되지 않으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9월 개관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시장은 이어 “광주시민은 현재 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광주가 그동안 약속과 무력감을 떨쳐내고 세계와 문화로 소통하며 새롭게 도약할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다”면서 “이런 지역민들의 기대에 정치권이 적극 부응해 주길 바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양당 간사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시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특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역민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문화프로젝트로 지금 처리되지 않으면 9월로 예정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광주 관련 법안’ 운운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광주 동구의회도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전시·공연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교류 등 공공성이 크게 요구되는 등 문화예술의 가치를 배양하는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국가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속히 처리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광주 서구, 광산구 의회가 각각 성명을 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략적 반대로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연합 등 ‘바람직한 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연석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라고 하기에 는 보기 민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국가로 하되 일부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7일 시의회 기저실에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 반복으로 인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빛가람 에너지밸리 공동 구축 노력해 달라”

김동철 산자위원장,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사장과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일 광주에서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 등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전작업 한 달여 만에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한전과 에너지 공기업의 노력과 활동을 평가한다”며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어 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또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맞이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면서 “발전소 가동정지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도 국민이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밸리 공동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전은 올 1438억원의 예산투자를 시작으로 에너지밸리 3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도시를 일본의 도요타나 영국의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처럼 에너지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에너지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혁신도시 인근에 500여개의 에너지 기업과 연구기관, 관련대학 등이 집적화돼 명실상부한 세계적 에너지밸리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기대되는 에너지밸리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광주와 전남을 새로운 에너지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에너지밸리 구축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수립해 지역과의 산학연 협력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북전단 필요시 안전조치”

통일부, 경찰과 협조키로

정부는 7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대교 진입 금지 등 통행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까지 포함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전날 의정부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월호 진도 피해 손실 보상

국회, 배·보상특별법 의결

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과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이들의 금융채무에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이 이뤄진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세월호 배·보상 신청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받고, 1개월간의 신청 기간도 주어진다.

국회는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단원과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빠져나온 선원은 지원 대상 ‘생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원과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별전형 인원은 해당 대학 입학 정원의 최대 1%다.

특별법은 또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국가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대출 이자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진도지역 손실보상 대상은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본 어업인, 수산물 생산감소 및 어업활동 실기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 통진당 광주·전남 비례의원 5명

지위확인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호남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옛 통진당 소속 전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원 5명은 7일 오후 광주시·전남도·여수시·순천시·해남군 등 5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의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이미옥(광주시의회)·오미화(전남도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 5명이다. 이현숙(전북도의회)전 의원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선거권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퇴직된다”는 선거법 조항을 퇴직 처분의 근거로 내세웠다”며 “이는 ‘철정정치인’에 해당할 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자의적으로 당을 이탈하는 경우에만 국한돼야 하고 강제해산처럼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하지 않는다고 원고들은 해석했다.

앞서 오병운 전 의원 등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5명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광주·5·18 기념문화센터 대강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은 결론을 내리고 나서 사실을 짜깁기하고 억지 논리로 통합진보당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기회권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관광공사

1636

결과

믿음소망

알아보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하·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버링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왕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경선안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주)콜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SHANGH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입학상담문의

GoChina

중국 전문 인력양성

www.gotochina.co.kr

지금 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233-9582

(중) 구오탈리